

ISSN 2734-0317

www.kita.net

KITA

통상 리포트

2024

VOL.14

美 트럼프 실행정부의 세제 개혁 전망 및 시사점

강금윤 수석연구원

KITA 통상리포트 2024 VOL.14

美 트럼프 신행정부의 세제 개혁 전망 및 시사점

발행인 윤진식

편집인 조상현

발행처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발행일 2024년 12월 30일

美 트럼프 신행정부의 세제 개혁 전망 및 시사점

Contents

요약

01. 배경	1
02. TCJA 및 트럼프 조세 공약	4
03. 법인세 및 TCJA 관련 쟁점	13
0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18

강금윤 수석연구원 (02-6000-5620, gy.kang@kita.or.kr)

※ 본 리포트 인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박빙으로 예상되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과 공화당의 '레드스윕*'으로 끝나며 차기 미국 정부의 세제 개혁 방향도 윤곽을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기간 중 법인세 인하와 일명 '트럼프 감세법(TCJA)**'이라고도 불리는 2017년 세제 개혁 조치의 연장 및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이는 민주당 해리스 후보의 증세 공약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의회 통과를 예상하기 어려웠으나 공화당이 행정부에 이어 의회까지 장악함에 따라 정책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 레드스윕(Red Sweep): 미국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과반을 차지한 것을 빨강을 상징으로 삼는 공화당의 색에 빗대어 표현한 것

** TCJA(Tax Cuts and Jobs Act):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

미국 재정적자 심화를 우려하는 당내 세력의 반대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에 직면할 경우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하는 감세 공약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상원과 하원의 과반을 차지한 공화당이 예산 조정절차(Budget Reconciliation Process)를 활용해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 예산조정 절차를 거칠 경우 상원 필리버스터를 피할 수 있고 상원 의석의 단순 과반(51석) 확보로 법안 통과가 가능해, 이미 상원의 과반(53석)을 확보한 공화당에 유리하다. 트럼프 당선인이 1기 행정부 재임 시절 추진한 TCJA와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모두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의회의 문턱을 통과하였다.

법인세 감면 공약은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0%로 1%p 인하하고, 미국 내 제조 기업은 15%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초 대상 기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방 법인세 인하를 공약했다가, 선거가 다가오자 미국 내 제조 및 일자리 유지 조건을 추가했다. 연방 재정적자 우려가 깊고 증세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화당은 자국우선주의를 강조하는 경제·통상 기조에 이어 미국 내 생산 기업에 혜택을 주는 감세 정책을 우선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당선인은 법인세 인하가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해 오히려 세수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OECD 차원의 글로벌최저한세 합의가 주요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 법인세율을 글로벌 최저 한세율인 15%보다 더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25년 말부터 일몰 예정인 TCJA와 관련해서도 상당부분 개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재임 당시 법인세율 및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등 조세 개혁 조치를 담은 TCJA를 예산 조정절차로 통과시켰다. 예산조정절차는 해당 법안이 장기적으로 재정 목표를 저해하지 않을 것을 요구

하기 때문에 상당수 감세 조항은 추후 일몰되도록 설계되었다. 일몰조항과 관련하여 트럼프 당선인은 개인소득세 감면, 보너스감가상각 등 감세 혜택 유지·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이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의회 소관 상임위 구성이 TCJA 제정 시와 달라진 점은 TCJA 관련 트럼프 공약의 실현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를 비롯한 디지털세(필라 1, 2)의 미국 내 비준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OECD 차원의 디지털세 합의가 미국의 조세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조치라며 반대해온 공화당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자체적인 국제조세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필라 1의 전면 시행을 위해 필요한 미국의 참여가 부재한 상황에서, 일부 국가가 디지털서비스세(DST) 등 일방적인 과세 조치를 시행한다면 트럼프 정부는 1기에서와 같이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지난 10년간 140여 개국이 참여한 국제조세 협력 체계가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가간 조세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IRA를 녹색사기라고 비난하며 세제 혜택 축소를 주장한 점은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공약과 별개로 대미투자 기업에 큰 부담이다. IRA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미사용 공제액을 제3의 기업에게 판매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현금흐름상의 이점을 추가로 누릴 수 있었다. IRA로 해외투자 유치 등 수혜를 입은 지역이 대부분 미국 남동부 공화당 우세지역에 있어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기업의 상당한 대미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IRA 세제 혜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한 점은 우려스럽다.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는 미국내 제조업 강화와 무역 불균형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고용 창출 효과, 세수 증가, 산업경쟁력 강화 등 다방면으로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 알려 입법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세제 개혁은 '25년 예정된 TCJA 일몰조항 등으로 인해 이미 예정됐던 것이나 트럼프 후보의 당선 및 공화당 우세로 그 방향성이 더욱 뚜렷해졌다. 조세 정책은 경제·산업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수단으로써 종종 이용되며, 자국 내 제조업과 첨단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 이러한 세제 개혁은 일몰 예정인 TCJA 조항의 연장 또는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미 예정된 TCJA의 일몰 조항에 대해서는 이를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1 배경

□ 2017년 제정된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TCJA)'의 일부가 '25년 말로 일몰되고 트럼프 당선인이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공약함에 따라 향후 조세 정책에 큰 변화가 예정

-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기간 중 연방 법인세를 인하(21%→20%)하고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5%까지 추가로 인하할 계획을 밝힘
-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7년 통과시킨 대규모 세법 개혁 법안인 TCJA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세율을 낮추고 다국적기업의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을 신설하는 등 조세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혁하는 내용을 담음
- TCJA는 예산조정(Budget Reconciliation) 절차로 통과되어 재정 우선순위 및 예산 목표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는데, 이로 인해 일부 개인 소득세에 적용된 감세 혜택이 종료되거나 다국적 기업에 대한 해외소득 과세가 강화되는 등 변화가 예정*

* 세부 변경 내용 p.10~11의 표1~2 참조

- '24년 상원 및 하원의원 선거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TCJA의 감세 혜택을 유지·확대하는 방향의 추가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고소득층에 적용되는 소득세·재산세 등 감면 혜택 축소를 주장하는 등 입법상의 마찰 예상

〈참고1. 美 의회 입법 절차 - 예산조정절차〉

- (개념) 미국 의회의 특별한 입법 절차로 현행 예산 결의안에 포함된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법률을 간소화하여 통과시키는 것
- (특징) 세입, 지출, 채무한도 등을 조정하여 재정 목표를 맞추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 경우 상원에서 필리버스터* 없이 단순 과반수로 법안 통과 가능

* 특정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 방식의 합법적 의사진행 지연 제도

- (절차) 예산 결의안 채택, 위원회별 법안 개발 및 보고, 본회의 심의, 양원 간 이견 조정, 대통령 최종 승인 등 5단계로 구성

1 조정 지시(reconciliation directives)가 담긴 예산 결의안(the concurrent budget resolution) 채택

2A 관련된 상임위원회가 지시사항에 맞추어 법안을 수정하여 보고

2B 두 개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예산 조정을 요구받은 경우, 예산위원회는 이들 상임위원회의 제안서를 통합한 '일괄 예산조정법안(omnibus reconciliation bill)'으로 본회의 보고

3 본회의에서 신속 절차(토론 및 법안수정 제한)를 통해 심의

4 상·하원간 차이를 의견 교환(amendment exchange)이나 협의위원회(The Conferenece Committee)를 통해 조율

5 대통령의 최종 서명 또는 거부권 행사

□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개한 강령(Platform)은 조세 정책의 큰 틀을 제시

- 경제 성장, 재정 건전성, 소득 불평등 완화 등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견해차로 정당 간 조세 공약에 차이 발생
 -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앞세우며 공화당은 TCJA의 영구화 및 관세 인상을 통한 추가적인 법인세·소득세의 감세를 주장
 - － 반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였던 민주당에서는 법인세 인상(21%→28%), 최저 법인세율(15%) 설정 등 증세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

〈표1. 정당별 조세 정책 관련 강령상의 주요 언급 비교〉

공화당/트럼프	민주당/해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장 제2절. 트럼프 감세 영구화 및 팁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화당은 모든 미국인을 위해 표준 공제를 두 배로 늘리고 자녀 세액 공제를 확대하며 경제 성장을 촉진한 <u>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의 조항을 영구화할 것입니다...</u>” • 제5장 제1절. 무역 재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화당은 외국산 제품에 대한 기본 관세를 지지하고, 트럼프 호혜무역법을 통과시키며,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할 것입니다. 외국 생산자에 대한 관세가 올라가면 미국 <u>근로자, 가족, 기업에 대한 세금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장. 일하는 가정을 위한 세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당은 연 소득 40만 달러 미만의 모든 사람들을 세금 인상으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 제2장. 부유층과 대기업이 공정한 몫을 지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든 대통령은 이 <u>세율(법인세)을 28퍼센트로 다시 인상할 것입니다.</u> 그리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조세 회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15%의 최저 법인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바이든은 미국 <u>다국적 기업이 해외 소득에 대해 지불하는 세율을 21%로 두 배 인상하고, 트럼프가 도입한 인센티브를 폐지...</u>할 것입니다.”

자료: 정당별 2024 강령

□ 감세 공약을 실제로 입법하기 위해서는 연방 재정적자 확대 여부가 중요한 고려사항

- 법인세율 인하와 같이 기존 조세 정책을 변경하는 법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해야 하며, 트럼프 당선인의 감세 공약은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당내 매파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음¹⁾
- 미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는 '24년 미국의 연방 재정 적자가 \$1.8조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으며²⁾, 이는 TCJA가 제정된 해('17)의 적자액(\$6,557억)보다 약 2.8배 많은 수치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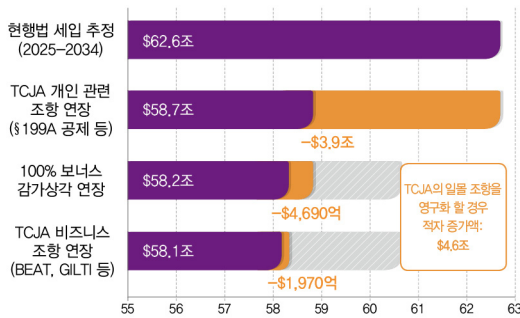
1) Tobias Burns (2024.11.12.), “Trump win sets up GOP battle between deficit hawks, tax cutters”, THE HILL.

2) David Lawder(2024.10.10.), “CBO estimates \$1.8 trillion US deficit for fiscal 2024”, Reuters.

3) BUREAU OF THE Fiscal Service(2023.2.9.),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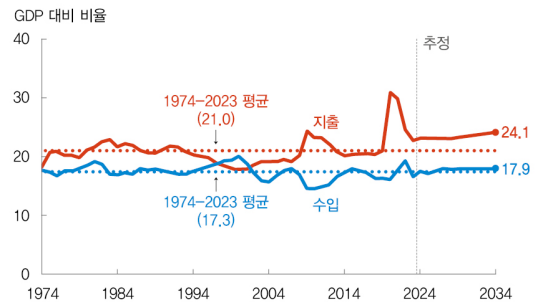
-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10년 후 \$20조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⁴⁾ 같은 기간 TCJA의 연장에 따르는 비용이 \$4.7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존재⁵⁾
 - GDP 대비 비율로 측정했을 때 연방 지출은 향후 10년간 직전 반세기 평균치(21%)를 매년 상회하여 '34년에는 24.1%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연방 수입은 반세기 평균치(17.3%)와 유사한 수준의 증가(17.9%, '34)가 예상되는 상황

〈그림1. 시나리오별 TCJA의 재정적자 영향〉



자료: Deloitte

〈그림2. 美 연방 수입·지출 비교〉



자료: CBO

- '25.3.까지 적용될 임시예산안은 연방 부채한도 폐지(또는 유예)를 주장한 트럼프 당선인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으나 가까스로 상원을 통과('24.12.21.)
 - 연방 부채한도 폐지 주장에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제기됐으며,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25년 초에 부채 한도를 1조 5천억 달러로 인상하고 메디케이드, 사회보장 등이 포함된 정부 지출은 2조 5천억 달러 삭감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⁶⁾

4) Congressional Budget Office(2024.6.18.), "n Update t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4 to 2034" Congressional Budget Office.

5) Benjamin Guggenheim(2024.5.8.), "Some GOP members want to boost corporate tax rate, Smith says", Politico Pro.

6) Jennifer Scholtes(2024.12.20.), "House Republicans float a debt limit, spending pact deal — with themselves", Politico.

2 TCJA 및 트럼프 조세 공약

가.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TCJA)' 주요 내용

□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재임 당시 법인세율 및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등 광범위한 조세 개혁 조치를 담은 TCJA를 제정하고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국회를 통과시킴('1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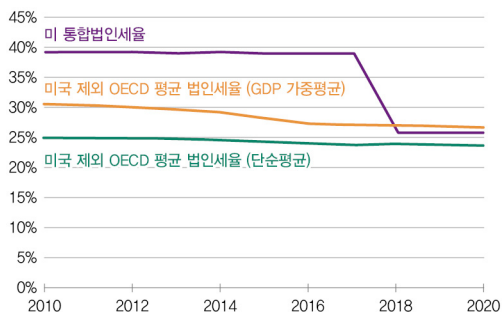
○ (법인세 인하)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15%로 대폭 인하하려 했으나⁷⁾ 세수 감소 우려 및 일부 공화당 의원의 반대 등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21%의 단일세율로 조정

– 개정 전 미국의 통합법인세율(Combined Corporate Tax Rate)*은 미국을 제외한 OECD 평균보다 12%p(GDP가중평균)~15%p(단순평균) 높았으나, 법인세 인하가 도입된 '18년부터 OECD 평균에 가까워짐⁸⁾

*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법인세율을 합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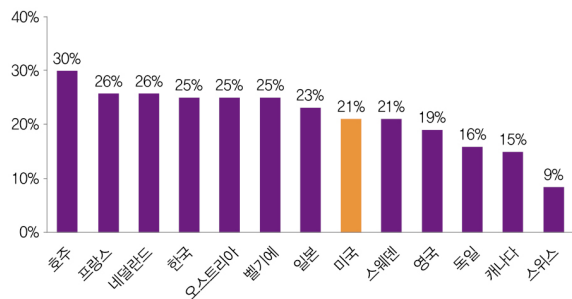
– 일몰 규정이 존재하는 다른 세제 개혁 조항과 다르게 법인세율 인하는 영구적인 조치로 도입되어 별도의 개정 입법이 없는 한 현재 세율을 유지

〈그림3. 美 통합법인세율과 OECD 평균 법인세율 비교〉



자료: Tax Foundation

〈그림4. 주요국 명목 법정 법인세율(2022년)〉



자료: PGPF.ORG.(원출처: OECD Tax Database)

주: 법정 단일(flat) 또는 최고한계세율(top-marginal) 기준

○ (보너스 감가상각) '17.9월부터 '22.12월까지 취득된 자산(기계, 장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 100% 감가상각을 허용하여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와 경제 활성화 도모

7) Damian Paletta(2017.4.26.), "White House unveils dramatic plan to overhaul tax code in major test for Trump", The Washington Post.

8) Daniel Bunn(2021.2.17.), "U.S. Cross-border Tax Reform and the Cautionary Tale of GILTI", TAX FOUNDATION.

- (연구개발비 감가상각) '22년부터 지출하는 연구개발비는 미국 내에서 수행된 연구의 경우 5년, 해외에서 수행된 연구의 경우 15년에 걸쳐 자본화하고 상각하도록 규정
- (해외소득과세)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base erosion)에 의한 과세회피를 방지하고 미국 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GILTI*, BEAT**, FDII***를 신설
 - * 저세율과세 무형자산소득(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GILTI)
 - ** 세원잠식 남용방지세제(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BEAT)
 - *** 해외무형자산소득(공제)(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 FDII)
- GILTI와 BEAT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방 법인세 인하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채우기 위해 신설
- FDII는 해외로 수출하는 무형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저율과세하는 혜택으로 지적재산 등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미국에서 무형자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장려
- (소득세 인하) 2016년 유세 당시 트럼프 후보는 대선 공약에서 12%, 25%, 33%의 3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제시하였으나⁹⁾ 실제 입법은 기존 7단계 누진세율을 유지하는 대신 최고세율을 포함한 일부 구간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

〈표2. 2017년 TCJA 소득세 관련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개인	
소득세율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 소득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일부 인하 (기존) 10%, 15%, 25%, 28%, 33%, 35%, 39.6%, → (변경) 10%, 12%, 22%, 24%, 32%, 35%, 37% •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을 상향 조정 (예)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소득 구간을 \$418,400(개인) 및 \$470,700(부부)에서 \$500,000(개인) 및 \$600,000(부부)로 상향
표준공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공제액이 \$12,000(단독 신고), \$18,000(세대주 신고), \$24,000(부부 공동 신고) 등으로 기존 대비 약 두 배 증가 • 표준공제 확대로 인적공제, 이사 비용 공제 등이 삭제되고 주택 담보 대출 이자 세액공제 한도가 강화되는 등 제도 정비
자녀세액공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세 미만 자녀당 기존 \$1,000에서 \$2,000로 인상
패스스루(pass-through) 소득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S법인(S-Corporation) 등 패스스루 사업체의 소유주가 적격사업소득(QBI*)의 최대 20%를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 *QBI: Qualified Business Income • 목적: TCJA에서 법인세율을 인하(35%→21%)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패스스루 사업체 소유주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 • 적격사업소득: 미국 내에서 수행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소득으로서 자본이득, 이자, 배당 등은 제외하고 계산

자료: 법률, 언론보도 등 참고하여 저자 정리

9) Alan Cole(2016.9.19.), "Details and Analysis of Donald Trump's Tax Plan, September 2016", TAX FOUNDATION.

〈표3. 2017년 TCJA 법인세 및 국제조세 관련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법인			
법인세율 인하	• 최고 35%의 세율로 적용되던 법인세를 21%의 단일세율로 전환		
	소득 구간	기존 세율(∼'17)	변경 세율('18∼)
	\$50,000 이하	15%	21%
	\$50,001∼\$75,000	25%	
	\$75,001∼\$10,000,000	34%	
\$10,000,000 초과	35%		
보너스감가상각 (Bonus Depreciation)	• '17.9.27.부터 '22.12.31까지 취득된 자산에 대해 100% 감가상각 허용 • 대상 자산: 기계, 장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 일몰 규정: '23년부터 매년 20%씩 감소하여 '26.12.31. 만료		
연구개발비 감가상각 (R&D Amortization)	• '22년부터 지출하는 연구개발비의 자본화 및 감가상각을 규정 • 내용: 국내 연구개발비는 5년, 해외 연구개발비는 15년간 감가상각		
GILTI	• 개념: 미국 다국적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저세율 국가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하여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 대상: 무형자산(지적재산, 특허, 브랜드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동적 소득을 과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해외 자회사의 순소득이 간주유형자산순소득(QBAI*×10%-이자비용)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미국 주주법인의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 QBAI: Qualified Business Asset Investment • 계산: GILTI 소득의 50%를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10.5%(=21%×0.5)의 세율을 적용* * '26년부터 공제율 37.5%로 감소 (적용 세율은 13.125%로 인상) • 비고: 해외에서 부과된 세액 중 80%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FDII	• 개념: 미국에 기반을 둔 무형자산으로부터 파생되어 발생한 수출 소득을 저율로 과세하는 제도 • 목적: 지적재산 등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미국에서 무형자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장려 • 계산: 무형자산소득(FDII)과 관련한 세금의 37.5%를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13.125%(=21%-(21%×0.375))의 세율을 적용* * '26년부터 공제율 21.875%로 감소(적용 세율은 16.406%로 인상)		
BEAT	• 개념: 미국에 본사를 두거나 다른 국가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 해외 계열사 등에 이자비용 등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 내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 대상: ①3년 평균 매출이 \$5억 이상이면서 ②해외 계열사 등에 지급한 금액이 전체 비용 공제액 중 3% 이상 • 계산: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가 '세원 잠식 지급금(base erosion payments)'을 과세표준에 다시 합산하여 10%*의 최저한세율로 계산한 법인세보다 작으면 차액을 추가로 과세 * '26년부터 12.5%로 인상		

자료: 법률, 언론보도 등 참고하여 저자 정리

〈표4. 2026년 TCJA 주요 변경 예정 사항〉

구분	'26년 변경 사항
개인소득세 관련	
소득세율	• 최고세율을 포함한 소득세 세율 인상(예: 37%→39.6%) • 누진세가 적용되는 소득 구간 하향 조정
표준공제	• 표준공제액 하향 조정 (예: (단독신고)\$12,000→\$6,350)
자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액 하향 조정 (예: \$2,000→\$1,000)
다국적기업 관련	
GILTI	• GILTI 소득공제율 축소에 따른 유효세율 인상 (10.5%→13.125%)
FDII	• FDII 세액공제율 축소에 따른 유효세율 인상 (13.125%→16.406%)
BEAT	• BEAT 최저한세율 인상 (10%→12.5%)
비즈니스 관련	
보너스감가상각	• '23부터 적용된 단계적 일몰 규정에 따라 '26.12.31. 만료
연구개발비 감가상각	• 일몰 규정 없음
패스스루 소득공제	• 패스스루 소득공제 일몰

자료: 법률, 언론보도 등 참고하여 저자 정리
주: 연도별로 인플레이션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나. 2024년 트럼프 조세 공약 주요 내용

□ (법인세) 연방 법인세율을 현 21%에서 20%로 낮추고,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 낮은 법인세율(15%)을 적용하는 등 감세 정책을 펼칠 계획

- 트럼프 당선인의 조세 공약은 법인세율을 28%로 인상 및 부유층 대상 세금 인상을 담은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의 공약과 극명히 대비
- 트럼프 당선인은 당초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 밝혔으나('24.7.)¹⁰⁾, 선거가 다가 오자 미국 내 제조 및 일자리 유지 조건을 더한 추가적인 법인세 감세 공약으로서 제시('24.9.)¹¹⁾
 - 세금 인하를 받기 위한 미국 내 제조 요건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TCJA)' 제정으로 폐지된 '국내 생산 소득공제(DPAD)*'에 규정된 것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나, 무엇이 국내 생산으로 간주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제도가 복잡해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 유발 우려¹²⁾

* DPAD(Domestic Production Activities Deduction): 기업이 미국에서 생산, 건설, 개발하는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최대 9%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혜택

10) Bloomberg Businessweek(2024.7.16.), "The Donald Trump Interview Transcript", Bloomberg.
11) C-Span(2024.9.5.), "Former President Trump Remarks at the Economic Club of New York", C-Span.
12) Jeanne Whalen, Richard Rubin, Chip Cutter and Chao Deng, "Trump Proposal to Cut Tax Rate for U.S. Manufacturers Spurs Flurry of Questions", THE WALL STREET JOURNAL.

– 월가는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 공약으로 미국 기업(S&P 500)의 수익이 약 4%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¹³⁾, 미국의 초당파적 싱크탱크인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연방 세수가 향후 10년간 약 2,0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¹⁴⁾

- 투자 촉진과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100% 보너스 감가상각을 재도입할 것을 주장했으며, 연구개발 비의 즉시 비용 처리가 허용될 가능성

□ (국제조세) GILTI, FDII, BEAT 등 국제조세 세제 개편을 광범위하게 추진

- 공화당은 '26년부터 적용될 GILTI 세율을 13.125%에서 12.5%로 인하하고, BEAT 세율을 12.5%로 유지하는 등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주장¹⁵⁾
-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미셸 스틸(Michelle Steel) 의원은 TCJA의 일부로 도입된 FDII가 미국 조세 정책의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이익을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언급('24.4.)
 - 스틸 의원은 현행 FDII 공제율(37.5%)을 '25년 말 이후에도 유지할 것을 주장했고 이 경우 무형자산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현행 법인세율(21%)보다 더 낮은 유효세율(13.125%)이 영구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¹⁶⁾
- OECD와 G20을 중심으로 140여 국가가 논의한 디지털세(필라1, 필라2) 도입은 불투명
 - 디지털세 필라1(Amount A) 발효를 위해서는 미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조치라며 반대하고 있어 비준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¹⁷⁾
 - * 조약 비준을 위해서는 상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조항이 '미국의 조세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의회 승인 없이 협상을 강행한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¹⁸⁾
 - * UTPR(Undertaxed Payment Rule): ①최종모기업 소재국 실효세율이 15%에 미달 또는 ②모기업 소재 지국에서 적격 소득산입규칙(IIR)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UTPR을 도입한 국가에 소재한 자회사가 추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보완 규정
 -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일부 국가가 디지털세 합의에 앞서 자체적으로 부과한 디지털서비스세(DST)에 대해 통상법 301조 조사에 착수, 보복관세 부과를 결정했으나 협상을 위해 집행을 유예한 바 있음¹⁹⁾

13) Esha Dey and Julien Prnthus(2024.9.5.), "Trump Tax Plan Lifts S&P Profit, Harris' Would Cut, Goldman Says", Bloomberg.

14)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2024.9.6.), "Donald Trump's Proposal to Lower the Corporate Tax Rate to 15%", CFRB.

15) Crowell(2024.10.17.), "Harris and Trump on Tax: Top 5 Tax Issues for Companies To Watch", Crowell.

16) Caitlin Reilly(2024.4.30.), "Expiring foreign income deduction gains bipartisan support", Roll Call.

17) Senate Committee on Finance(23.10.11.), "Crapo: Congress Still in the Dark on OECD Pillar One Global Tax Deal Impact on U.S.",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Finance.

18) Tobias Burns(2024.9.19.), "Republicans rebuff global tax provision as Treasury implements possible workaround", THE HILL.

〈표5. 국제조세 관련 공화당 정책(안) 요약〉

구분	공화당 주장(안)	비교	TCJA 따른 '26년 변경 예정 세율
GILTI	• 유효세율을 12.5%로 인하	<	• 13.125%
FDII	• 유효세율을 13.125%로 인하	<	• 16.406%
BEAT	• 유효세율을 12.5%로 유지	=	• 12.5%

자료: 언론종합

〈참고2. 디지털세 필라1, 2 개요〉

- 글로벌 IT 기업들이 기존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16년부터 OECD와 G20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조세 개혁안에 대한 논의 시작
- 당초 디지털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에서 '디지털세(Digital Tax)'로 명명되었으나, 논의 진행 과정에서 제조업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 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
- 2021년 10월,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는 제13차 총회에서 필라1·2 최종 합의문 및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IF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받아 대외 공개

필라1

다국적기업이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곳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

-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의 일정액(Amount A)을 배분하여 고정된 물리적 사업장이 없어도 시장 소재국에서 과세가 가능하게 함
- (적용대상)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 및 세전이익률 10% 초과 글로벌 다국적기업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를 규정하여 저세율관할권과의 거래로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 투자유치를 위한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Race to the Bottom)' 제한을 목표로 함

-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 중 동일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간 소득·세액을 합산하여 실효세율을 산정하고, 해당 실효세율이 글로벌 최저한세율(15%)에 미달시 부족분에 대한 추가세액 징수
- (적용대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각각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

자료: 강금윤(2024)

19) USTR(2021.6.2.), "USTR Announces, and Immediately Suspends, Tariffs in Section 301 Digital Services Taxes Investigations", USTR.

□ (소득세) TCJA에 따라 '25년 말 일몰 예정인 개인소득세 및 상속세 등의 감세 혜택을 유지·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할 전망

- TCJA의 일몰규정에 따라 '26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등이 인상(37%→39.6%)되고 표준공제액이 최대 약 \$13,000 감소할 예정이나, 트럼프 당선인은 만료되는 개인소득세 관련 감면을 영구화할 것을 공약
 - 공화당은 정강에서 TCJA의 영구화를 명시했으며 트럼프 당선인도 유세중 팁에 대한 세금 면제 및 TCJA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 연장 등을 지지
- '26년부터 축소 예정인 자녀세액공제액은 현행 \$2,000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
 - 공화당 부통령 후보 J.D.밴스(J.D. Vance)는 소득에 관계 없이 자녀세액공제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인상 규모는 현 \$2,000에서 \$5,000가 바람직하다고 언급²⁰⁾
- 미국에서 제조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관련된 대출 이자를 전액 소득 공제할 것을 공약²¹⁾
 -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미국내 판매를 막기 위함이며, 트럼프는 해당 소득 공제가 미국산 자동차 판매를 촉진하고 일자리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
 - 미국내 생산된 외투기업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해당 소득 공제 혜택의 제공 여부 등 구체적인 요건은 불명확
- 이밖에 사회보장소득 및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각종 세금 폐지, 팁에 대한 세금 면제 등 소득세 감세 정책을 공약

20) Gabriella Cruz-Martínez(2024.8.19.), "Child Tax Credit: JD Vance Floats Enhanced Version in Surprise Pledge", Kiplinger.

21) James Oliphant and Kanishka Singh(2024.10.23.), "Trump says he'll make interest on car loans tax deductible if domestically built", Reuters.

〈표6. '24 트럼프 조세 공약 주요 내용 및 발언〉

구분	내용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대상 법인세율을 21%에서 15%로 인하• ('24.9.5.)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법인세율을 21%에서 15%로 인하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24.9.5.), “미국 근로자를 아웃소싱하거나 해외로 보내거나 대체하는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상당한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너스감가상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비 등 취득에 대해 100%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특례 영구화• ('24.9.24.) “중장비 및 기타 장비의 첫째 비용 100%를 상각할 수 있고, 새로운 제조 투자에 대해서는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1년 상각이 가능합니다.”
세제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IRA에 따른 \$7,500 상당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폐지 또는 축소• ('24.8.21.) “저는 전기차의 열렬한 팬이지만, 가솔린차, 하이브리드차 등 다른 모든 자동차도 좋아합니다”
디지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럼프와 공화당은 OECD/G20 차원의 디지털세 합의에 비판적이며, 트럼프는 미국 기업에 특정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에 상호관세 및 기타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²²⁾<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럼프가 취임 첫날부터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DST) 시행에 대한 트럼프 2기 내각의 불만을 일부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²³⁾• ('24.11.25.) “1월 20일, 저는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할 것입니다.”• ('24.2.23.)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100%, 200%, 심지어 300%의 관세를 내도록 한다면, 우리도 그들에게 100%나 200%, 300%의 동일한 관세를 내도록 할 것입니다”
개인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팁에 대한 세금 면제, TCJA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 연장 등• ('24.9.5.) “제 계획…은 트럼프 세금 감면을 영구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세금 감면이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팁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료: 언론 종합

□ (IRA)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명령을 통해 IRA 보조금 수혜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 수정을 시도할 전망

- 트럼프 당선인은 IRA에 대해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²⁴⁾이자 ‘녹색 사기’²⁵⁾라고 비난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이나, 기투자지역의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전면 폐기가 불가할 경우 행정 명령을 통한 ‘제한적 무력화(skinny repeal, 일부 폐기)’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

22) Sam Sholli(2024.8.23.), “What would a Donald Trump presidency mean for tax policy?”, International Tax Review.

23) Rick Tachuk(2024.12.4.), “Opinion: Ottawa should reconsider the Digital Services Tax”, Financial Post.

24) Swanson, Ana(2023.2.7.), “America’s Trade Deficit Surged in 2022, Nearing \$1 Trillion”, The New York Times.

25) Tamborrino, Kelsey(2024.9.5.), “Trump vows to pull back climate law’s unspent dollars”, Politico.

－ IRA 시행 2년간('22.7.~'24.6.) 민간 부문에서 청정 기술과 인프라에 투자한 금액은 \$4,930억 이상이며 상대적으로 공화당 지지 비중이 큰 남부 지역에 집중²⁶⁾

－ 산업계 뿐만 아니라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IRA 폐지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어 IRA를 완전 폐기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²⁷⁾, 재무부·IRS 지침 재해석 방식으로 행정부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²⁸⁾

* 예: 핵심광물 및 배터리부품 재분류, 상업용/리스 차량 면제 폐지, 50% 부가가치 테스트 상향 적용 등

○ 선거 과정에서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합류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전개함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이 일부 변화될 수 있는 점도 변수²⁹⁾

－ 트럼프 당선인은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수장으로 임명했고, 머스크는 행정부 정책 및 예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로 부상³⁰⁾

〈표7. IRA 세액공제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 시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①배터리 핵심광물 요건과 ②배터리 부품 요건 충족시 각각 \$3,750씩, 최대 총 \$7,500 세액공제 핵심광물 또는 배터리 부품이 해외우려기업(FEOC)에서 조달되거나 해외우려기업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는 차량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	배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셀 생산 시 \$35/kWh 세액공제 배터리 모듈 생산 시 \$10/kWh 추가 공제 		
	태양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듈) \$0.07/W, (셀) \$0.04/W, (웨이퍼) \$12/m², (폴리실리콘) \$3/kg 		
	풍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레이드) \$0.02/W (나셀) \$0.05/W, (타워) \$0.07/W 		
청정제조 투자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 제조시설 신·증설 시 투자비용의 6~30% 공제 (적정임금 및 수습 요건 충족 시 30%, 미충족 시 6%) 		
청정전력 발전설비 세액공제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력 생산 단위당 공제 (\$0.03/kW) 	국내산 요건 충족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제혜택 금액의 10% 추가 공제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격 투자의 6%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p 추가 공제

자료: 한국무역협회

26) Bermel et al(2024.8.7.), "Clean Investment Monitor: Tallying the Two-Year Impact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Rhodium Group.

27) Ari Natter(2024.8.8.), "House Republicans Tell Johnson Not to Repeal Climate Law", Bloomberg.

28) 김중덕(2024.11.13.),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정책: 경제적 영향과 이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9) 윤춘(2024.11.6.),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정책과 국내 통상·산업 영향", 윤춘.

30) Miranda Nazzaro(2024.11.12.), "Elon Musk, Ramaswamy land Trump admin roles", THE HILL.

3 법인세 및 TCJA 관련 쟁점

가. 법인세

□ 법인세율 인상·인하는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회 논의 과정에서 공약과 달라질 수 있음

- 미국 헌법 제1조에 따르면 조세·관세·공과금·소비세 등의 부과·징수는 연방의회의 권한으로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함
-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으로 확정됐음에도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당내 매파의 반대 또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에 직면할 경우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
 - 공화당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53석을 차지하며 4년만에 연방 상원 다수당 지위를 회복했으나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는 60표 이상이 필요³¹⁾
 - 바이든 행정부의 IRA도 상원의원의 반대 의견으로 인해 예산조정절차 및 당시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의 캐스팅보트를 거쳐 당초 제안된 예산 규모보다 축소되어 통과됐음(\$3.5조→\$7,400억)
-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재임 당시에도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15%로 인하할 것을 추진했으나, 의회 통과 과정에서 정책이 수정되어 최종적으로 21%의 단일세율로 제정

〈표8. 제119대 미 의회 구성(24.12.6. 기준)〉

상원(100석)	하원(435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화당: 53석 • 민주당: 45석 • 무소속: 2석 (민주당 분파(Cauc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화당: 220석 • 민주당: 215석

□ 공화당이 양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상황에서 예산조정절차를 이용해 의회 과반의 지지만으로 감세 공약을 신속히 처리할 가능성도 상존

- 예산조정절차를 거칠 경우 상원 필리버스터를 피할 수 있고 상원 의석의 단순 과반(51석) 확보로 법안 통과가 가능해, 이미 상원의 과반(53석)을 확보한 공화당에 유리
 - 조정 절차를 거치는 법안은 세입, 지출, 채무한도 안건에 한해 각각 연간 최대 1회 발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지출과 세수를 동시에 하나의 예산조정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31) CRS(2021.1.25.), "The Budget Reconciliation Process: Stages of Consideration", CRS.

- 예산조정절차는 1980년 처음 도입된 이래로 거의 매해 법안 통과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1989~2017년까지 29년 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4개 법안을 제외하고 21개 법안이 동 절차를 거쳐 통과됐음³²⁾

〈참고3. 미합중국 헌법 제1조 입법부 주요 내용〉

- 제1항(입법권)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은 합중국의회에 속하며, 합중국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 제2항(하원)
 1. 하원은 각 주(states)의 주민이 2년마다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주의 선거인은 가장 많은 의원을 가진 주의회의 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제3항(상원)
 1. 상원은 각 주의 주의회에서 선출한 6년 임기의 상원의원 2명씩으로 구성되며, 각 상원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 제8항(연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연방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합중국의 채무를 지불하고, 공동 방위와 일반 복지를 위하여 조세,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는 합중국 전역을 통하여 획일적이어야 한다.
 18. 위에 기술한 권한들과, 이 헌법이 합중국 정부 또는 그 부처 또는 그 관리에게 부여한 모든 기타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

자료: 국회도서관 번역본 참조

□ 트럼프 당선인의 감세 공약은 연방정부의 부채 부담을 더 심화시킬 우려

- 미 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23말 기준 연방정부의 부채 부담은 \$26.2조(GDP의 97.3%)에 달했으며 '34년에는 \$50.7조(GDP의 12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³³⁾
- 트럼프 당선인과 민주당 해리스 후보의 공약은 모두 재정 적자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었고 이에 따르면 2026~35년까지 10년간 트럼프는 연방 부채를 \$7.75조, 해리스는 \$3.95조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³⁴⁾
 - 차이는 주로 트럼프 당선인이 모든 가구의 세금과 법인세 감면을 공약한 반면 해리스 후보는 연간 소득 \$40만 미만 가구에 대해서만 세금감면(TCJA)을 연장할 것으로 전제하는 데에서 발생³⁵⁾
 - 트럼프 당선인은 감세로 인한 세수 손실을 관세 인상으로 상쇄할 것을 주장했으나, 이는 재정 적자 확대 규모에 미치지 못함

32)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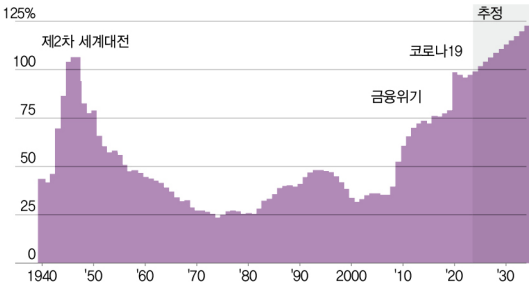
33) CBO(2024.6.18.), "An Update t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4 to 2034", CBO.

34)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2024.10.28.), "The Fiscal Impact of the Harris and Trump Campaign Plans",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CRFB).

35) 한국은행 뉴욕사무소(2024.10.24.), "미국 재정적자와 미국채금리 동향 및 전망",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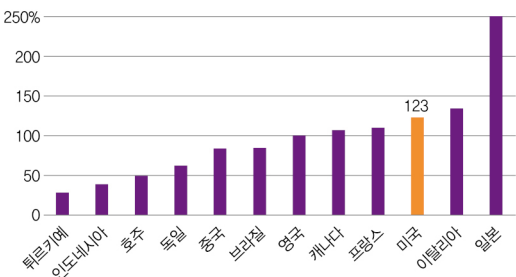
-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의 감세 공약으로 재정적자에 심각한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³⁶⁾,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의 의회 통과 과정에서도 재정 적자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전망

〈그림5.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자료: CBO
주: 주 및 지방정부 부채 제외

〈그림6. 주요국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23)〉



자료: OECD
주: 주 및 지방정부 부채 포함

〈표9. 대선 후보 정당별 재정소요 규모 추정('26-35)〉

(단위: 십억 달러)

구분	트럼프(공화당)	해리스(민주당)
TCJA 연장 및 수정	-5,350	-3,000
개인 세금 감면 및 소득공제 확대	-3,750	-1,600
기업 세금 감면 및 소득공제 확대	-250	-250
기타 의료·국방·교육·이민·주택 관련 지원	-1,050	-2,800
재정확장요인(A)	-10,400	-7,650
기업 및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n.a.	4,000
관세 증가	2,700	n.a.
기타 소비 및 세금공제 축소	1,000	250
재정개선요인(B)	3,700	4,250
순이자(C)	-1,050	-550
재정적자 확대 순규모(A+B+C)	-7,750	-3,950

자료: CRFB

36) Christopher Condon(2024.1.9.), "Yellen Says Extending Trump Tax Cuts Would Worsen Deficit", Bloomberg.

나. TCJA

- TCJA 일몰 조항에 따라 '26년부터 개인소득세를 포함한 광범위한 세목에 대한 세율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정책상의 변화가 불가피
 - 트럼프 당선인은 TCJA의 감세 혜택을 유지·확대하는 방향의 추가 입법을 추진하는 반면 해리스를 후보로 내세웠던 민주당은 개인소득세·재산세 등 감면 조항을 연장하지 않거나 혜택을 더 축소할 것을 제시
 - 설비 구입 초기에 100%의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보너스감가상각은 '26년 말 일몰 예정이나 양당은 기업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해당 특례를 복원·연장하는데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³⁷⁾
 -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TCJA에 규정된 자녀세액공제 확대에 대해 긍정적 입장
 -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일시적으로('21~'22년) 자녀세액공제를 기존 \$2,000에서 최대 \$3,600으로 인상한 바 있음
 - 민주당 해리스 후보는 자녀세액공제를 팬데믹 당시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를 영구화할 것을 공약했으며, 공화당 부통령 후보 밴스 역시 자녀세액공제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언급
-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이 되더라도 소관 위원회 구성의 차이로 인해 TCJA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음³⁸⁾
 - TCJA 제정('17.12.)은 공화당 주도로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 남아있는 공화당 소속 하원 세입위원회 의원은 5명에 불과
 - * Jason Smith(미주리), Vern Buchanan(플로리다), Adrian Smith(네브래스카), Mike Kelly(펜실베이니아), David Schweikert(애리조나)
 - 현재 총 25명의 공화당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 중 10명은 TCJA 제정시 연방의원이 아니었으며, 2명은 '24년 말 은퇴 예정
 - 공화당 제이슨 스미스(Jason Smith) 미 하원세입위원장은 TCJA의 만료 및 연장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했을 때 현행 21%의 법인세율을 포함한 모든 것이 논의 대상이라고 밝힘('24.6.)³⁹⁾
 - 현재 13명의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 중 TCJA 제정에 관여한 재무위 소속 상원의원은 6명
 - * Mike Crapo(아이다호), Chuck Grassley(아이오와), John Cornyn(텍사스), John Thune(사우스다코타), Tim Scott(사우스캐롤라이나), Bill Cassidy(루이지애나)

37) Deloitte(2024.9.3.), "Approaching the cliff: Tax policy and the 2024 elections", Deloitte.

38) Grant Thornton(2024.9.18.), "Built-in changes make 2025 a pivotal year for tax", Grant Thornton.

39) Jason Smith(2024.6.27.), "All options must be on the table to deliver tax relief for working people", Washington Examiner.

〈표10. 상원 재무위원회 공화당 위원 구성('24.9.)〉

Mike Crapo(아이다호주)	Chuck Grassley(아이오와주)	John Cornyn(텍사스주)
John Thune(사우스다코타주)	Tim Scott(사우스캐롤라이나주)	Bill Cassidy(루이지애나주)
James Lankford(오클라호마주)	Steve Daines(몬타나주)	Todd Young(인디애나주)
John Barrasso(와이오밍주)	Ron Johnson(위스콘신주)	Thom Tillis(노스캐롤라이나주)
Marsha Blackburn(테네시주)		

자료: Grant Thornton

주: ■'17년 당시 재무위원회 위원

〈표11.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위원 구성('24.9.)〉

Jason Smith(미주리주)	Vern Buchanan(플로리다주)	Adrian Smith(네브라스카주)
Mike Kelly(펜실베이니아주)	David Schweikert(애리조나주)	Blake Moore(유타주)
Greg Steube(플로리다주)	Michelle Fischbach(미네소타주)	Michelle Steel(캘리포니아주)
Kevin Hern(오클라호마주)	Carol Miller(웨스트버지니아주)	Beth Van Duyne(텍사스주)
Nicole Malliotakis(뉴욕주)	Mike Carey(오하이오주)	Randy Feenstra(아이오와주)
Darren Lahood(일리노이즈주)	David Kustoff(테네시주)	Lloyd Smucker(펜실베이니아주)
Claudia Tenney(뉴욕주)	Brian Fitzpatrick(펜실베이니아주)	Greg Murphy(노스캐롤라이나주)
Jodey Arrington(텍사스주)	Ron Estes(캔서스주)	Drew Ferguson(조지아주)
Brad Wenstrup(오하이오주)		

자료: Grant Thornton

주: ■'17년 당시 세입위원회 위원, ■'18년 포함 그 이후 당선된 의원, ■'24년 은퇴 예정

〈참고4. 트럼프 1기 행정부 상원·하원 구성('17-'20)〉

- 트럼프 행정부 1기 집행 초기인 제115대 의회에서는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었음
- 차기 제116대 의회에서는 하원이 민주당 다수로 바뀌며 입법상의 견제 역할 수행

(단위: 의석 수)

구분		제 115대 의회		제 116대 의회	
		2017	2018	2019	2020
상원	공화당	52		53	
	민주당	48		45	
하원	공화당	241		199	
	민주당	194		235	

자료: 상·하원 홈페이지

주: ■ 공화당이 다수당인 경우, ■ 민주당이 다수당인 경우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미국의 세제 개혁은 '25년 예정된 TCJA 일몰조항 등으로 인해 이미 예정됐던 것이나, 트럼프 후보의 당선 및 공화당 의회 장악으로 그 방향성이 더욱 뚜렷해짐
 - 조세 정책의 개편은 일몰 예정인 TCJA 조항의 연장 또는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미 예정된 TCJA의 일몰 조항에 대해서는 이를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
 - 조세 정책은 경제·산업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이용되며, 트럼프 당선인의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공약은 궁극적으로 미국내 제조업 활성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것
 - 세금에 대한 정당별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보너스감가상각 연장,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양당이 유사한 견해를 갖고 있는 부분도 존재하여 공화당은 이를 법인세 인하 공약 등의 의회 통과 과정에서의 절충안으로 활용할 가능성
- 공화당이 대선 승리에 이어 상·하원 과반을 확보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중간 선거 전 법인세 인하 공약을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
 - 2년마다 하원 전원, 상원의 1/3을 선거 대상으로 하는 미국 의회 선거 특성상 공화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임기 초반에 조세 감면, 관세 인상 등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야함
 - 트럼프 후보는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주요 인사를 내정하는 등 차기 정부 구성에 착수했으며 '25.1월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 2기는 1기보다 신속하게 내각 구성을 마무리하고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1기 행정부에서 추진한 '트럼프 감세법(TCJA)'도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2017년 하원 공화당 의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했음
 - * 당시 찬성 227표(공화당 227, 민주당 0), 반대 205표(공화당 13, 민주당 192)로 통과
 - 공화당이 연방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된 만큼 예산조정절차를 이용해 의회 과반의 지지만으로 감세 공약을 신속히 처리할 가능성에도 대비
- 자국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자국내 제도가 요건인 법인세 인하 공약(15%)을 중점 추진할 전망
 - 트럼프 후보는 당초 대상 기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방 법인세 인하(21%→20%)를 공약했다가 선거가 다가오자 미국 내 제조 및 일자리 유지 조건을 추가한 추가적인 법인세 인하(21%→15%)를 제안
 - 공화당은 연방 재정 적자 문제와 민주당의 반대 등을 고려했을 때 법인세율을 포괄적으로 인하하는 안보다 자국내 생산 기업을 우대하는 감세안을 우선할 가능성

- 트럼프 당선인은 법인세 인하가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해 오히려 세수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은 미국내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

□ 미국이 디지털세 합의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각국의 일방적 과세 조치 및 미국의 보복조치로 국제조세 합의 기반이 흔들릴 우려

-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은 OECD/G20을 중심으로 합의한 디지털세(필라1,2)에 부정적인 입장이며, 디지털세 프레임워크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기존의 GILTI, BEAT 등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국제조세 과세체계를 구축할 전망
- 디지털세 전면 시행을 위한 필요조건인 미국의 참여가 부재한 상황에서 주요국이 디지털서비스세(DST) 등 일방적 과세 조치를 도입할 경우 미국이 보복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
 - 공화당은 캐나다의 DST 부과 결정에 대해 통상법 301조 조사를 즉시 시행할 것을 미 무역대표부에 촉구했으며('24.7.), 보복조치를 우려한 주요국들도 기존의 DST를 수정·철폐해야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음
- 지난 10년간 140여 개국이 참여한 국제조세 협력 체계가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가간 조세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필요

□ 트럼프 당선인의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적 정책은 IRA 인센티브 축소에 따른 우리 기업의 부담을 일부 경감시킬 수 있으나 IRA 전면 폐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우려

- IRA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미사용 공제액을 제3의 기업에게 판매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현금흐름상의 이점도 함께 누릴 수 있음
- IRA로 해외투자 유치 등 수혜를 입은 지역이 대부분 미국 남동부 공화당 우세지역에 위치해 있어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기업의 상당한 대미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IRA 세제 혜택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려스러운 부분
-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는 미국내 제조업 강화와 무역 불균형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고용 창출 효과, 세수 증가, 산업경쟁력 강화 등 다방면으로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 알려 입법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

[표]

1. 정당별 조세 정책 관련 강령상의 주요 언급 비교 (p.2)
2. 2017년 TCJA 소득세 관련 주요 내용 (p.5)
3. 2017년 TCJA 법인세 및 국제조세 관련 주요 내용 (p.6)
4. 2026년 TCJA 주요 변경 예정 사항 (p.7)
5. 국제조세 관련 공화당 정책(안) 요약 (p.9)
6. '24 트럼프 조세 공약 주요 내용 및 발언 (p.11)
7. IRA 세액공제 주요 내용 (p.12)
8. 제119대 미 의회 구성('24.12.6. 기준) (p.13)
9. 대선 후보 정당별 재정소요 규모 추정('26-35') (p.15)
10. 상원 재무위원회 공화당 위원 구성('24.9.) (p.17)
11.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위원 구성('24.9.) (p.17)

[그림]

1. 시나리오별 TCJA의 재정적자 영향 (p.3)
2. 美 연방 수입·지출 비교 (p.3)
3. 美 통합법인세율과 OECD 평균 법인세율 비교 (p.4)
4. 주요국 명목 법정 법인세율(2022년) (p.4)
5.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p.15)
6. 주요국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23) (p.15)

[참고]

1. 美 의회 입법 절차 - 예산조정절차 (p.1)
2. 디지털세 필라1, 2 개요 (p.9)
3. 미합중국 헌법 제1조 입법부 주요 내용 (p.14)
4. 트럼프 1기 행정부 상원·하원 구성('17-'20) (p.17)

참고자료

[국내 문헌 · 기사]

김종덕(2024.11.13.),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정책: 경제적 영향과 이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춘(2024.11.6.),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정책과 국내 통상·산업 영향”, 윤춘.

한국은행 뉴욕사무소(2024.10.24.), “미국 재정적자와 미국채금리 동향 및 전망”, 한국은행.

[해외 문헌 · 기사]

Alan Cole(2016.9.19.), “Details and Analysis of Donald Trump’s Tax Plan, September 2016”, TAX FOUNDATION.

<https://taxfoundation.org/research/all/federal/details-analysis-donald-trump-tax-plan-2016/>

Ari Natter(2024.8.8.), “House Republicans Tell Johnson Not to Repeal Climate Law”,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8-07/house-republicans-tell-johnson-not-to-repeal-climate-law-credits>

Benjamin Guggenheim(2024.5.8.), “Some GOP members want to boost corporate tax rate, Smith says”, Politico Pro.

<https://subscriber.politicopro.com/article/2024/05/theres-gop-interest-in-raising-the-corporate-tax-rate-says-top-republican-tax-writer-00156799>

Bermel et al(2024.8.7.), “Clean Investment Monitor: Tallying the Two-Year Impact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Rhodium Group.

<https://www.cleaninvestmentmonitor.org/reports/tallying-the-two-year-impact-of-the-inflation-reduction-act>

Bloomberg Businessweek(2024.7.16.), “The Donald Trump Interview Transcript”,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features/2024-trump-interview-transcript/>

BUREAU OF THE Fiscal Service(2023.2.9.),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https://fiscal.treasury.gov/reports-statements/financial-report/>

C-Span(2024.9.5.), "Former President Trump Remarks at the Economic Club of New York", C-Span.

<https://www.c-span.org/video/?538141-1/president-trump-remarks-economic-club-york>

Caitlin Reilly(2024.4.30.), "Expiring foreign income deduction gains bipartisan support", Roll Call.

<https://rollcall.com/2024/04/30/expiring-foreign-income-deduction-gains-bipartisan-support/>

Christopher Condon(2024.1.9.), "Yellen Says Extending Trump Tax Cuts Would Worsen Deficit",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1-08/yellen-says-extending-trump-tax-cuts-would-worsen-deficit>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2024.9.6.), "Donald Trump's Proposal to Lower the Corporate Tax Rate to 15%", CFRB.

<https://www.crfb.org/blogs/donald-trumps-proposal-lower-corporate-tax-rate-15>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2024.10.28.), "The Fiscal Impact of the Harris and Trump Campaign Plans",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CRFB).

<https://www.crfb.org/papers/fiscal-impact-harris-and-trump-campaign-plans>

Congressional Budget Office(2024.6.18.), "An Update t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4 to 2034", Congressional Budget Office.

<https://www.cbo.gov/publication/60039>

Crowell(2024.10.17.), "Harris and Trump on Tax: Top 5 Tax Issues for Companies To Watch", Crowell.

<https://www.crowell.com/en/insights/client-alerts/harris-and-trump-on-tax-top-5-tax-issues-for-companies-to-watch>

CRS(2021.1.25.), "The Budget Reconciliation Process: Stages of Consideration", CRS.

<https://sgp.fas.org/crs/misc/R44058.pdf>

Damian Paletta(2017.4.26.), "White House unveils dramatic plan to overhaul tax code in major test for Trump", The Washington Post.

<https://wapo.st/4isxEe5>

Daniel Bunn(2021.2.17.), "U.S. Cross-border Tax Reform and the Cautionary Tale of GILTI", TAX FOUNDATION.

<https://taxfoundation.org/research/all/federal/gilti-us-cross-border-tax-reform/>

David Lawder(2024.10.10.), "CBO estimates \$1.8 trillion US deficit for fiscal 2024",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us/cbo-estimates-18-trillion-us-deficit-fiscal-2024-largest-after-covid-2024-10-08/>

Deloitte(2024.9.3.), "Approaching the cliff: Tax policy and the 2024 elections", Deloitte.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us/Documents/Tax/tax-legislation-policy-ahead-of-2024-election-us.pdf>

Esha Dey and Julien Pnthus(2024.9.5.), "Trump Tax Plan Lifts S&P Profit, Harris' Would Cut, Goldman Says",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9-05/s-p-500-trump-harris-tax-plans-could-move-s-p-500-earnings-goldman-sachs-says>

Gabriella Cruz-Martinez(2024.8.19.), "Child Tax Credit: JD Vance Floats Enhanced Version in Surprise Pledge", Kiplinger.
<https://www.kiplinger.com/taxes/child-tax-credit-jd-vance-floats-enhanced-version-in-surprise-pledge>

Grant Thornton(2024.9.18.), "Built-in changes make 2025 a pivotal year for tax", Grnat Thornton.
<https://www.grantthornton.com/insights/articles/tax/2024/built-in-changes-make-2025-a-pivotal-year-for-tax>

James Oliphant and Kanishka Singh(2024.10.23.), "Trump says he'll make interest on car loans tax deductible if domestically built", Reuters.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trump-says-hell-make-interest-car-loans-tax-deductible-if-domestically-built-2024-10-22/>

Jason Smith(2024.6.27.), "All options must be on the table to deliver tax relief for working people", Washington Examiner.
<https://www.washingtonexaminer.com/restoring-america/faith-freedom-self-reliance/3060905/all-options-table-deliver-tax-relief-working-people/>

Jeanne Whalen, Richard Rubin, Chip Cutter and Chao Deng, "Trump Proposal to Cut Tax Rate for U.S. Manufacturers Spurs Flurry of Questions", THE WALL STREET JOURNAL.
<https://www.wsj.com/economy/trump-proposal-to-cut-tax-rate-for-u-s-manufacturers-spurs-flurry-of-questions-24ac5cee>

Jennifer Scholtes(2024.12.20.), "House Republicans float a debt limit, spending pact deal – with themselves", Politico.
<https://www.politico.com/live-updates/2024/12/20/congress/gop-debt-limit-deal-details-00195671>

Miranda Nazzaro(2024.11.12.), "Elon Musk, Ramaswamy land Trump admin roles", THE HILL.
<https://thehill.com/policy/4987402-trump-musk-advisory-group-spending/>

Rick Tachuk(2024.12.4.), "Opinion: Ottawa should reconsider the Digital Services Tax", Financial Post.
<https://financialpost.com/opinion/ottawa-should-reconsider-digital-services-tax>

Sam Sholli(2024.8.23.), "What would a Donald Trump presidency mean for tax policy?", International Tax Review.
<https://www.internationaltaxreview.com/article/2do10hkri3k8dcqa1bpq8/direct-tax/what-would-a-donald-trump-presidency-mean-for-tax-policy>

Senate Committee on Finance(23.10.11.), "Crapo: Congress Still in the Dark on OECD Pillar One Global Tax Deal Impact on U.S.",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Finance.
<https://www.finance.senate.gov/ranking-members-news/crapo-congress-still-in-the-dark-on-oecd-pillar-one-global-tax-deal-impact-on-us>

Swanson, Ana(2023.2.7.), "America's Trade Deficit Surged in 2022, Nearing \$1 Trillion",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3/02/07/business/economy/us-trade-deficit.html?smid=url-share>

Tamborrino, Kelsey(2024.9.5.), "Trump vows to pull back climate law's unspent dollars", Politico.
<https://www.politico.com/news/2024/09/05/trump-inflation-reduction-act-00177493>

Tobias Burns(2024.9.19.), "Republicans rebuff global tax provision as Treasury implements possible workaround", THE HILL.
<https://thehill.com/business/4889039-house-republicans-oecd-utpr-treasury-camt/>

Tobias Burns (2024.11.12.), "Trump win sets up GOP battle between deficit hawks, tax cutters", THE HILL.
<https://thehill.com/business/4984127-trump-tax-cut-proposal-republicans/>

USTR(2021.6.2.), "USTR Announces, and Immediately Suspends, Tariffs in Section 301 Digital Services Taxes Investigations", USTR.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1/june/ustr-announces-and-immediately-suspends-tariffs-section-301-digital-services-taxes-investigations>

〈2024년 KITA 통상리포트 발간 목록〉

No.	제목	작성자	발간일자
14	美 트럼프 실행정부의 세제 개혁 전망 및 시사점	강금윤	24.12.30
13	폰 데어 라이엔 집권 2기 EU 통상정책 : 심화되는 美·中 경쟁 속 생존 전략	한아름	24.12.18
12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통상연구실	24.11.07
11	주요국의 제약·바이오의약품 산업 공급망 재편 정책 및 시사점	한주희	24.11.01
10	대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내용과 영향	이유진/한아름	24.09.11
9	한-UAE CEPA 주요 내용 및 우리 수출기업 인식 조사	강금윤/오지인	24.09.03
8	중국 공급과잉에 대한 주요국 대응 및 시사점	이정아/강금윤/오지인	24.08.22
7	인공지능(AI) 규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 및 시사점	정해영	24.07.26
6	미-중 전략경쟁, 레거시 반도체로 전이되나? - 주요국의 레거시 반도체 정책 현황 및 시사점	이유진	24.07.12
5	美 의회 대중국 견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한아름	24.06.10
4	한국의 FTA 체결현황 점검	통상연구실	24.05.24
3	미국의 경제안보·핵심기술 통제 전략 강화 및 시사점	정해영/이정아/한주희/고성은	24.02.27
2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강금윤	24.02.20
1	글로벌 공급망에 커진 또 다른 경고등 - 강제노동 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 대응방안	한아름	24.02.08



TRADE REPORT

2024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7층
2024. 12. 30